

李 대통령-丁대표 회동 여야 '국정 동반자' 관계 정착 될까

‘상생 모델’ 구축... “생산적 만남” 평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25일 오찬회동은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극한대결로 치달았던 여야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서로 윈-윈(win-win) 하는 방향의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경제팀 교체, 촛불시위자 수사 등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세계 금융위기 공동대처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 문제를 포함해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구역 개편, 대통령-야당 대표 수시 회동 등 총 8개 항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 이 대통령과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회동 등 과거의 ‘대통령-야당 대표 회동’이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는 더욱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국정 동반자’로 인식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회동을 갖기로 한 것이나 청와대 정부수석이나 관계 기관장으로 하여금 주요 국정 현안을 야당 대표에게 사전 브리핑 하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대야 소통의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도 회담 후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과제이자 이명박 정부의 성과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경제위기 극복 문제와 관련,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 문제도 다뤘다. 정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기하면 지방 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대통령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기전 가벼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긍정 약속
종교편향·경제팀 교체 등 논란 여전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조속 추진에 관한 확실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발전적 여야관계와 순탄한 국정 운영을 나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과거 경험에 비추보면 향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여야 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의제, 즉 종교편향 논란과 정부 경제팀 교체, 종부세 및 법인세 감세 논란, 공기업 민영화, 촛불시위자 수사 문제 등 하나하나가 모두 여야 관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에서 광주시·전남도와의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회담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 논의해보자” 원론적 언급

영남 편중 논란 ‘5+2 광역경제권’ 의제 올랐지만... 지역정가, 해결책 제시 요구 거세질 듯

25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에서 영남 편중 논란을 빚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의제가 의제로 올랐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날 정세균 대표의 문제 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더 논의해보자. 광주 예기도 듣고 알려달라”고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더 논의해보자”며 여지를 남겨 두긴 했지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철학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후 여야 관계가 완전 복원, 정치적 소통이 활발히 된다면 일부 정책이 보완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그 가능성은 낮은 지적이다.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에 일부 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경우, 타 경제권에 서도 똑 같은 요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광역경제권 개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호남권을 배려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이다.

남해안 선-벨트와 서해안 벨트 사

업 선정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5+2 광역경제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서겠다”고 말했으며, 김동철 광주시장 위원장도 “일단은 행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겠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경우 강력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직자·지도층 비리 합동수사팀 뜬다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보고

뇌물수수액 최고 5배까지 벌금 부과 추진

정부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각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

하고 범정부적 공동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검찰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검찰청에 설치할지, 각 지검별로 설치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수사가 공직사회 및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수사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정치권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벌금형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It features the text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7 out of 10 university transfers are graduates of Kim Young) and 'www.kimyoung.co.kr'. It also includes a calendar icon for October 1s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Dongbu Jeonghalsi' (227-8088).

Advertisement for SCU Han's University. It highlights '한국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tudy at Han's University! Possible in Korea!) and 'SCU한국의대' (SCU Han's University). It provides the website 'www.scukorea.com' and phone number '010-6834-6253', along with information about admission counseling sessions.

Advertisement for 'Nongsanmulpumjilgwanlisa'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pecialist). It lists 'www.kimyoung.co.kr' and 'www.mdgosi.co.kr'. It details the exam schedule (October 1st) and the curriculum, including national support for the course fee (80% discount).

Advertisement for 'Gonginjeonggasa' (Public Personnel Exam Preparation). It features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Personnel Exam Specialist) and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Record number of graduates for the 18th exam). It lists exam dat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enghaengjeonggosi' (268-8111).

Advertisement for 'Gongmugwon' (Public Personnel Exam). It features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7.9 Grade Public Personnel Exam Preparation Course) and '전남고시학원' (Jeonnam Gosihakwon). It includes a calendar icon for October 1s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ww.mdgosi.co.kr' (222-4560).